

야 “불통인사 반성없어” 여 “엄중한 문책 있어야”

박대통령 '윤창중 파문' 대국민 사과...정치권 반응

靑 대대적인 공직기강 확립...인사 시스템 정비 불가피
위기관리 대응능력 부재 차대통령 국정운영 부담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태와 관련,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태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만큼 책임과 문책 선에서 이번 사태의 파문이 잠잠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파문이 박 대통령의 '불통 인사'에서 비롯된 만큼 청와대의 인사·위기관리 시스템 실패에 대한 사과와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윤창중 파문 항방은=이날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국격 훼손'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어떠한 사유와 진술에 관계없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사실 관계가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측에서 수사 협조 ▲관련자 책임 ▲공직기강 재확립 등을 약속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여러 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 70여일만에 직면한 최대 위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윤 전 대변인이 박 대통령이 단행한 '제 1호 인사'이고, 당선인 수석 대변인 인선 당시부터 '불통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박 대통령은 그를 청와대 초대 대변인으로 중용했으며 결과론적으로 대형 참사를 낳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먼저 '인사 스타일'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해신의 계기를 잡지 못한다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소지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미단의 이남기 홍보수석은 처음 사건보고를 받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을 보이는 등 청와대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미팀의 귀국 후에도 청와대는 부적절한 사과 등으로 성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향후 청와대 해신의 속도와 폭에 따라 파문이 잠재워질지, 후폭풍이 계속될 지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과에 대한 여야 반응=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잘못된 인사를 강행한 대통령 본인에게 근본적 책임이 있는 만큼 인사 잘못에 대한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허술한 위기관리 시스템 점검 및 재점검 계획 등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킬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은 미흡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사건의 정확한 실체 파악

과 청와대의 범죄인 도피 의혹 규명, 책임자 문책 및 청와대 참모진 전원 사퇴 관철 등을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운영위 소집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신속한 책임자 규명과 엄중 문책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날 사과와 공직기강 확립 약속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방미 성과를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창중 사건이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덮어버리고 이상하게 방향이 돌아가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엄중하고 빠른 진상 규명을 통해 철저한 처벌 내지는 문책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jzpark@kwangju.co.kr

'성추행' 신고 여직원 돌연 사직 의혹 증폭 문화원측 "그만 둘 예정이었다"

이번 사건 연관 가능성도 제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미국 현지경찰에 신고했던 주미 한국문화원 여직원이 사직한 것으로 12일(현지시간) 파악됐다.
이 직원은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인 인턴직원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해 들은 뒤 함께 있다가 워싱턴DC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한국문화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공교롭게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직후이긴 하지만 그 직원은 원래 대통령 방미 행사가 끝나면 그만둘 예정이었다"고 말해 이 직원의 사직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여성인 인턴직원과 함께 방을 쓴 이 문화원 직원은 인턴 직원으로부터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 듣고 워싱턴DC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인물로 알려졌다.
문화원 측이 정식 채용한 이 여직원이 사직한 것은 본인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문화원측이 설명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도 연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현지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날 이른 아침, 대략 7시 조금 넘어 프레젠테이션이 있던 페어팩스 호텔 내 한 사무실에서 대사관 인턴직원이 울고 있었다. 한국 문화원 소속 여직원이 그 인턴과 함께 있었으며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얘기가 밖으로 들려왔다"고 전했다.
피해 인턴직원과 문화원 직원은 오전 8시를 전후해 워싱턴DC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했으며, 현지 경찰은 이후 호텔로 조사경찰관을 보내 상황을 조사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그날 아침 피해를 당한 인턴직원이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 곧바로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서 "우리가 피해직원의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거나 묵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 성추행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미국 내 한인여성사이트인 '미시USA' 게시판에는 '성추행을 당한 인턴이 울고 있는 모습을 문화원 여직원이 발견하고 사건 정황을 최초 인지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당 서기관과 문화원장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화가 난 문화원 여직원이 피해여성 인턴과 함께 워싱턴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연합뉴스

이희호 여사
광주·봉하마을
잇따라 방문
내일부터 나흘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사진) 여사가 오는 15~18일 광주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잇따라 방문한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13일 "이 여사가 5·18 민주화운동 33주년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앞두고 1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광주와 목포,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만나 상임위 배치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강창희 의장 예방...상임위 배정 요청

교육·복지·환노위 중 1곳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3일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 상임위 배정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날 강 국회의장의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배정 절차를 그대로 다시 밟겠다"며 "제가 전문성을 살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교육, 보건복지, 환경

노동 등 3개 상임위 중 한 곳에 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전임 의원이 소속됐던 국회 정부위원회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정무위는 금융기관 등을 다루야 해서 제가 가진 (안팎) 주식과 업무상 충돌할 수 있다"며 "의사 출신이고, 여러 점에서 가고 싶은 곳이 보건복지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장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 권한은 국회법에 의거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안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국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의장이 전했다.
강 의장은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여야간 '상임위 교섭-비교섭단체 의원 비율'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과정이 끝나야 내가 안 의원의 상

임위 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법에 따라 원점 재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안 의원의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주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 (보건복지위)를 안 의원에게 양보하고 안 의원의 정부위원회로 옮겨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야 원내대표도 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여성 의원들

"윤창중 사건 축소·은폐 의혹 청문회 개최하라"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여성 시·구 의원들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조사할 청문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대참사는 발탁에서부터 자질 문제로 순탄치 않았던 문제의 인물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빛어낸 예고된 참사"라며 "청와대 참모진들의 자질, 역량, 복무기강 등 청와대 운영 전반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불통 인사의 결과로 빚어진 이번 사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의 총사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명품대출!

- ▶ 고액대출환영
- ▶ 사업자금대출
- ▶ 미준공건물
- ▶ 공유지분대출

※ 자사대출 / 자유상환 / 수수료없음 ※
최저 월 1%~월 3% 최고 연 39% 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010-4601-8942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계림동 ● 주치원 입구
대한생명 ● 고대 주차장
구.한미소평 ● 북경당 한의원
동부소방서

진료문의 062)227-7575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공-26호

NPL(부실채권)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오천경매

- 비법 배우면서 투자
- 실전 사례 교육
- 1인 1물건 추천
- 단독/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1,100만원
- 문의 010-3605-5000